

“전남광주특별시 권한 막대해…견제 장치 강화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의원 정수 문제도…“시의원 늘려 대표성 확보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전남광주특별시와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와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을 주제로 제171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기본 열개가 ‘강 행정, 약 의회’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넘어오는 권한과 예산 특례만 늘린다고 통합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부 작동 장치와 주민 권능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는 산업 육성과 개발 특례에 치중돼 난개발이나 자연이의 중심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개발부담금 면제와 민자사업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의회 심의와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등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가지 방안으로 시민의회(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전남 의원 정수가 균형이 맞지 않아 자칫 대표성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광주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사무처장은 “광주와 전남의 의원 비율이 1대 4 수준”이라며 “인구 비례 기준으로 조정해 광주 44%, 전남 56% 수준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소지역주의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30%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진 시의회 입법조사관도 “특별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통합이 아닌 사실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며 “한시적 당근책은 있으나 행정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치와 분권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이 경제다, 일자리다, 균형발전이다!
특별시 행정·교육통합 담양군 도민
행정통합 담양군 도민공청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 “광주와 전남 인구비율은 44%와 56%이지만 광역의원 의석수는 27% 대 73%로 광주의 의결권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광주를 지역구로 둔 광역의원수를 현재의

2배 수준인 40명으로 늘려 최소한의 인구 증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반드시 비례해서 커져야만 민주주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정책토론회에서 제

기된 시의회 권한과 시민 주권 강화 등을 향후 특별법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의 김 수출 실적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전남 김 가공 모습.

목포 대양산단 부호 신규 등록 전남 김 수출 실적 확 늘어난다

입주 기업 실적 전남 집계

전남도는 목포 대양산단의 ‘산업단지 부호’가 관세청에 신규 등록됨에 따라 그동안 타 시·도에 분사를 둔 대양산단 입주 기업의 수출 실적을 온전히 전남 실적으로 가져오게 돼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 대양산단은 대전김, 만전김 등 16개 우수 김 가공업체가 입주한 전국 김 가공생산과 수출 전진기지다. 하지만 그동안 고유 산단 부호가 등록되지 않아 분사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 실적이 분사 소재지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제품은 목포에서 제조됨에도 수출신고필증상 제조 장소가 ‘미상’으로 표기돼 김의 보고장인 전남의 김 수출 실적이 타 시·도로 집계된 것이다. 또 기업이 전남도의 수출 지원 사업(물류비·홍보 등) 신청 시 실적 증빙 부족으로 탈락하는 등 역차별을 겪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5년 8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9월부터 관세청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호 등록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11월 공식 요청서

를 제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등록 통보를 이끌어냈다.

이번 부호 등록으로 2026년 1월 중순부터는 관세청 수출 신고 시스템에 ‘목포 대양산단’ 부호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천김을 비롯한 입주 기업의 실적이 전남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된다. 실적 증빙 문제로 탈락했던 물류비 지원과 상담회 참여 등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도 입주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성과로 단기적으로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김 수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타 시·군으로 집계됐던 1억 달러 이상의 김 수출 실적을 되찾을 전망이다. 2025년 전남 김 수출 실적은 4억3000만 달러로 전국 11억3000만 달러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전남산 김 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업체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 민주주의 본산답다”

행정통합 명칭 합의 내용 SNS 게재…“대화와 타협 공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진행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

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자치단체 이름을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또 청사는 전남도 동부

청사, 무안청사, 광주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이성오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특별법안 의견 수렴

재정분권 확대·미래산업 육성·광역 교통체계 특례 등 논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안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8일 전남도청에서 순부터는 관세청 수출 신고 시스템에 ‘목포 대양산단’ 부호 입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천김을 비롯한 입주 기업의 실적이 전남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된다. 실적 증빙 문제로 탈락했던 물류비 지원과 상담회 참여 등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도 입주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성과로 단기적으로는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김 수출 실적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타 시·군으로 집계됐던 1억 달러 이상의 김 수출 실적을 되찾을 전망이다. 2025년 전남 김 수출 실적은 4억3000만 달러로 전국 11억3000만 달러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전남산 김 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업체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제안된 특별법(안)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에는 300여 특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 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다. 시·도민의 변화를 제갈할 제도적 기

반을 담았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추진협의체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만들고 있다”며 “협의체가 의결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할 시점”이라며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금품수수만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주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계 특별검사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헌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고객 상당액을 추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통학버스 LPG로 바꾸세요”
광주시, 1대당 300만원 지원

광주시는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우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총 4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매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개인 또는 기업당 1대만 가능하며, 7월 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우자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우자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